김경 칼럼

한반도 평화·한미동맹 강화 계기로 삼아야

본사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7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민감한 시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조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인 중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건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중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점차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변함없는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북 협상에서 초강경파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은 협상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고,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업적이 절실한 만큼 시기적으로도 북미가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 입장을 절충할 여지가 적지 않다.

북미는 비핵화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을 선호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방식을 원한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지금까지 북미 협상이 그랬다. 북미의 입장 절충으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라는 배가 물에 띄워지길 바란다. 북미 타협을 유도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협정이 규정하는 협력 수준은 낮아 종료하더라도 동북아 안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비판이 한미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기우임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시키는 게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 경위와 한국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는 등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내년 이후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한국 등 주둔 국가의 방어만이 목적은 아니다. 더구나 주한미군 분담금은 올해 8.2%나 증액되면서 1조원을 넘은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요구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현실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社 說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정부가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기 중이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물에서나마 생산적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이번 추석 연휴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주길 촉구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심한 일이다. 제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2당이자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두 당은 누가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말들이 나오는 까닭을 잘 살피길 바란다.

당장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극일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입법 숙제가 널려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거나 원안 처리하길 희망하지만, 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의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의 운명 역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타협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안갯속이다.

조국 장관 임명은 특히 그 후폭풍이 정기국회를 지배해 전체 진로를 좌우할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은 생각이 다른 여타 정당들의 계산법 변화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 두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치르는 자세를 보일 공산이 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조국 장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애초 대결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자신과 가족,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들로 한층 더 강한 마찰음을 내는 여야 정당들의 정기국회 성취 목표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입법과 정책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임을 헤아려 각 정당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기국회 전략으로 대결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독자 기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이 미흡하게 되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화재사고 아파트 대부분이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쉬우며 연기확산에 의한 대피가 어렵고 화재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의 확장추세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전용 주차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 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 유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자칫 대형피해 발생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특별소방점검 및 주민안전교육, 소방출동로확보 계도활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화재발생으로 5분 이상 경과 시 화재연소 확산 속도는 급속하게 증가되므로 화재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피난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성119안전센터 한선근

독자 기고

운전할 때 정지선 지키는 습관을 기르자

선(線)의 사전적 의미는 경계가 되는 금이나 줄이란 뜻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을 의미한다. 대표적 예로 중앙선, 정지선, 진로변경제한선 등이 있다. 그 중 정지선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생명선이다.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다.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안전운전의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는 음주·무면허·과속운전 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기도 한다. 간혹 횡단보도 한가운데 급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발생할 뻔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지선 지키기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게 된다면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자연스레 서행운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황색신호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횡단보도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해야만 정지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방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3m 정도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곳의 충돌사고가 바로 신호위반사고이다. 이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상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다.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김대원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회 장	김 경	주소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발행인	전 광 선	대표전화	(062)227-0000 / FAX (062)227-0084
사장·편집인	이 문 수	광고	(062)227-0083 /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김 경 석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